

카카오 평균임금 19% ↓, 네이버 이사보수한도 최대 반토막

건축경영 나서는 카카오

국내 정보기술(IT) 업계 대표 주자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자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사 임금 삭감, 임직원 성과급을 줄임으로써 건축 경영에 돌입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급여·상여·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을 포함한 카카오의 지난해 평균 보수가 1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19% 줄었다. 네이버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1억 3449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4.13%가 증가했다. 하지만 그 폭은 이 전년도 26.03%에 비해 크게 줄었다.

◆경제 악화로 스톡옵션 행사 늦춰

주요 포털 기업의 임직원 평균 급여가 전년 대비 줄어들거나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서 얻는 수익이 줄어든 탓으로 분석됐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등 악재로 이들 기업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당수 임직원들이 스톡옵션 행사 시점을 늦춘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의 지난해 1인당 평균 급여액(급여·상여·스톡옵션 행사차익)은 1억



최수연 네이버 대표.

네이버

연봉협상 사측과 노측 갈등 고조
물가상승률 5.1% 밀돌아 반발

3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9.19% 감소한 수치다. 2021년의 평균 급여(1억 7200만 원)가 직전해(1억 800만 원)보다 22.38%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네이버의 지난해 1인당 평균 급여액은 1억 34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3% 늘었지만 직전해 증가폭(26.03%)에 비해서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스톡옵션 행사차익



홍은택 카카오 대표.

카카오

스톡옵션 제외 평균 9500만원
근무제도 등 부대안건 협의 진행

을 제외한 연간 급여 및 상여 등의 지급 총액은 3412억 9100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1인당 평균 급여액은 남성은 1억 400만원, 여성은 8200만원으로 평균 95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는 52.8%와 53.1%나 감소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차익이 이전 대비 크게 줄어든 것이다.

◆네이버 연봉 인상 놓고 노사 갈등

네이버는 사측과 노조측에서 제시하는 연봉 인상을 폭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측은 3.8%를 제시한 반면 노조측은 11%를 제시해 7.2%의 차이가 난다.

네이버측은 “물가 인상률과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3.8%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직원들은 “3.8%는 지난해 연간 물가상승률인 5.1%를 밀돌아 연봉 동결이나 다름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측에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임금 협상이 제대로 진척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네이버는 연봉 인상률이 카카오에 비해 낮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네이버와 카카오는 연봉 경쟁을 벌여왔다. 2021년 1인당 평균 급여가 카카오가 1억 7200만원인 반면 네이버는 1억 2915만원을 기록했다.

카카오는 올해 연봉 인상을 6%대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사 보수 한도 대폭 줄여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사에 대해 지급하는 보수의 최고 한도를 30~50% 정도 줄인다.

네이버는 22일 주총을 통해 이사 총 7명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최고 한도를 15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카카오도 이사 총 7명의 보수 한도를 120억원에서 80억원으로 30% 이상 낮추게 된다. 또 카카오는 임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회사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거나 치명적인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급제한 규정까지 신설하기로 했다. 네이버가 이사 보수 한도액을 삭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는 해외 자회사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진행된 경력사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앞두고 절차를 중단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결국 이들 업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빅테크 공룡기업들도 최근 인력 감축에 나서는 등 건축경영에 돌입했다. 아마존은 최근 9000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미 지난 1월 8000명을 해고한 데 이어 2차 구조조정에 들어선 것이다. 메타는 지난해 11월에 전체 직원의 13%의 인력인 1만 1000명을 해고했으며, 지난 14일에도 1만명을 해고할 계획을 밝혔다. 구글 모 회사인 알파벳도 지난 1월 전체 직원의 6%인 1만 2000명을 정리했다.

/채유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애플페이’ 도입... “젊은층 환영” vs “자영업자 머뭇”

NFC단말기 교체 부담 느껴
‘수수료’ 결제액 최대 0.15%
신세계, 당분간 검토는 없어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국내 정식으로 상륙하면서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애플페이 사용 경험기가 속속 퍼지고 있다. 하지만 애플페이를 ‘환영’하는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영업자들은 애플페이 사용을 위해 단말기를 바꾸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신세계그룹의 경우는 애플페이 도입을 당분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주춤’, 신세계는 ‘아직’

국내 오프라인 간편결제 1위 사업자 삼성페이가 마그네틱 보안전송(MST)·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 모두를 지원하지만, 애플페이는 주파수 이용 NF

C 방식만 지원한다. 국내 NFC 단말기 보급률이 10% 수준이기에 결국 애플페이의 대중화는 NFC 단말기 보급률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NFC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 자영업자들은 애플페이 소식에도 당장 급하게 기기를 바꿀 계획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종로 부암동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아직까지 애플페이를 찾는 고객들이 많지 않다”며 “자영업자로서 결제 단말기를 바꾸는 게 비용 측면에서 고민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라고 할지라도 실물 카드를 한 장씩은 들고다니기 때문에 애플페이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고객이 발길을 돌릴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애플페이가 부과할 ‘수수료’도 자영업자들에게는 부담이다. 애플은 한

국에서도 애플페이 결제액의 최대 0.15% 정도를 수수료로 챙길 계획으로 전해졌다.

신세계그룹은 이번에도 새로운 결제 시스템 도입에 신중한 모습이다. 신세계그룹 계열 가맹점은 편의점 이마트 24를 제외하고 스타벅스, 신세계백화점 등을 필두로 애플페이를 도입하지 않는다. 신세계그룹의 이러한 움직임은 삼성페이 출시 때도 있었던 일이다. 신세계그룹은 삼성이 2015년 8월 삼성페이가 시장에 나올 때도 출시 후 1년 4개월이 지난 2016년 12월에서야 삼성페이 결제를 시작했다. 스타벅스가 애플페이와 제휴하지 않은 배경에는 신세계그룹 간편결제 서비스인 ‘SSG페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젊은 층이 찾는 애플페이, 사용 가맹점 어디?

애플페이 가맹점들은 애플페이 도입

하며 빠르게 고객들을 맞이했다. 애플페이가맹점 중 하나인 세븐일레븐에서 애플페이로 물건을 구입하고 “어떤 고객들이 애플페이를 사용하냐”고 물었다. 애플페이 결제를 진행한 점원은 “아이폰을 이용해서 애플페이로 결제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젊은 고객들이다”라며 “유동인구가 젊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라면 더 빠르게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애플페이 상륙 소식에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다. 현재는 대부분의 편의점과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코스트코, 홈플러스 같은 백화점·마트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스타벅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커피 전문점(▲투썸플레이스 ▲빽다방 ▲이디야 ▲할리스 ▲커피빈 ▲폴바셋 등)에서도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CU에서 애플페이를 사용해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 모습. /허정윤 기자

이 밖에도 외식 전문점, 호텔·리조트, 온라인 결제, 생활가전, 주유 등 애플페이 가맹점 마크가 붙어있는 NFC 기기를 소지한 곳에서는 애플페이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 정확한 애플페이 사용 가맹점은 현대카드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공정위, 효성 부당지원 혐의 ‘사실상 무혐의’ 심의종료

전원회의서 사실관계확인 곤란 결론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여간 조사한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의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혐의가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됐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효성의 진흥기업에 대한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에 대한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건을 심의한 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려지는 ‘무혐의’와 달리 위법 여부 판단이 불가할 때 내려지는 조치로, 제재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무혐의 결론과 같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효성이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을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므로 범위 밖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검찰 격)이 혐의에 대해 조

사를 벌였으나, 전원회의(1심 법원 격)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공정위는 2020년 효성측의 계열사 부당지원 신고를 받고 2021년 4월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심사관 조사에서는 효성(2018년 6월 4일 이후 효성중공업)이 2012~2018년 워크아웃 대상기업이 된 계열사 진흥기업에 건설사업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기업 대주주인 효성은 2011년 5월 채권단과 경영개선약정을 체결하고, 공사수주 연도별 매출액 목표 등 경영실적 달성에 대한 책임을 분담키로 했다. 진흥기업은 이듬해 1월부터 기업 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워크아웃으로 전환,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인해 민간 PF(프로젝트파이낸싱) 건설공사 단독수주가 어려워지자 경영실적 달성을 위해 효성 측과 공동수주하는 형태로 영업활동을 계속했다.

효성의 위법혐의는 2가지다. 하나는 2012~2018년 중 효성과 진흥기업이 공동수주한 민간 PF 건설사업 27건 중에

서, 효성이 주간사이면서도 지분율 50% 이상을 진흥기업에 배정한 9건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해당 건에 대한 진흥기업의 기여도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관련 공사 매출액은 5378억원, 매출이익은 761억원 규모다.

심사관은 이같은 공동수주행위와 중간하도급 제공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지원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했다.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선 효성측이 진흥기업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했다’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